



# 報 道 資 料

이 자료는 2006년 5월 4일 (목)  
조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국제회의

- 일 시 : 2006년 5월 4일 (목) 09:00 ~ 15: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중회의실

-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가장 중요한 도전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를 2005년 본원의 대표 공동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일년간 심도있는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지난 1년의 연구를 매듭지으며 해외의 우수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 동안의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그들의 앞선 문제 해결 의식 및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규제 개혁 현황, 선진국의 규제정책 의 동향, 선진화된 규제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를 포괄하는 총 7편(KDI 2편, KDI School 1편, 해외경제학자 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임.
- 본 국제회의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주요 국가들의 경험 및 정책성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임.

※ 문의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958-4204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

## [프로그램]

2006년 5월4일(목)

08:30~09:00 등록 및 네트워킹

09:00~09:10 개 회

환영사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09:10~10:20 **Session 1-1. Why Does Korea Need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사회 : 김준경 (KDI 부원장)

발표 : "한국의 진입규제와 산업성장"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법인세와 산업별 성과분석:국제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김태중 (KDI School 교수), 성태운 (KAIST 경영대학원 교수)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 도미닉 만치니 (미국OMB 이코노미스트)

스테판 제이콥손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10:20~10:40 휴 식

10:40~11:50 **Session 1-2. Why Does Korea Need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사회 : 함상문 (KDI School 교수)

발표 : "OECD국가의 경쟁, 규제 및 생산성 수렴"

쥬세페 니콜레티 (OECD 구조정책분석부장)

"제도변수와 경제성과: 한국에의 시사점"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토론 : 안상훈 (KDI 연구위원)

테릴 포터 (호주 생산성위원회 이사)

11:50~13:20 휴 식

13:20~14:50 **Session 2. Experiences and Lessons**

사회 :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

발표 : "미국의 규제개혁: 미국의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

도미닉 만치니 (미국OMB 이코노미스트)

"절차개선을 통한 호주의 기업환경개선"

테릴 포터 (호주 생산성위원회 이사)

"규제개혁: OECD국가들의 경험과 시사점"

스테판 제이콥손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론 :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쥬세페 니콜레티 (OECD 구조정책분석부장)

김철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연구위원)

14:50~15:00 정리 및 폐막

## [Session 1-1] Why Does Korea Need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 “Entry Regulation and Industries' Performance in Korea”

#### 한국의 진입규제와 산업성장

##### 안상훈(KDI 연구위원)

-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규제의 개혁이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산업별 분석에서는 1991~1993, 2000~2002년의 6년간 자료를 활용, 진입 규제가 실제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해당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임
  - 진입 규제의 종류를 강한 규제(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와 약한 규제(신고, 등록)로 나누어 각 산업의 하위 산업 중 각각의 규제가 가해지는 비중과 규제가 가해지는 산업의 산출액을 구하여 이러한 진입 규제가, 사업체수, 출하액비율, 고용비율 등으로 측정된 기업의 시장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진입률은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을수록,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 즉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신규사업체의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
    -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진입률과 고용을 기준으로 한 진입률은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존재할 때 감소
      - \* 즉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체에 의한 출하액 또는 고용의 비율이 감소
    - 그러나 신고·등록 등의 약한 형태의 규제가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

- 결론적으로,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는 다양하게 측정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규제는 아니지만 높은 자본집약도 역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수행함이 밝혀짐
- 또한 산업내의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 발전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진입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결국 진입규제에 의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경우 산업의 성장이 더뎠다는 것을 보임
  -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 전체의 성장률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진입률에 의해 양(+)의 영향을 받음
  - 결국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는 신규 사업체의 해당 산업 진입을 억제하고 이는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
- **1990~2003년의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체별 회귀분석에서는, 진입 규제로 인해 신규업체의 진입과 한계업체의 퇴출이 저해되는 경우, 사업체별 고용증가와 생산성 증대에도 악영향을 미침을 확인**
  - 다른 여건들을 모두 고려한 경우, 진입률이 낮은 산업에 속한 사업체일수록 평균 고용증가율과 생산성증가율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다른 여건들을 모두 고려한 경우, 퇴출률이 낮은 산업에 속한 사업체일수록 생산성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현존하는 강한 형태의진입규제들(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경우, 산업별 진입률이 4% 정도 상승하고 퇴출율이 2% 정도 상승하며,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5%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Corporate Tax and Industries' Performance: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법인세와 산업별 성과분석: 국제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본 장은 세계 120여개국의 3만여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패널원자료인 Osiris를 이용하여 산업별 조세부담의 차이를 측정하고, 이러한 조세부담차이가 산업부문별 성장, 그리고 경제 전체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조세, 규제, 산업 성장,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산업별 조세 규제의 차이는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측정하고 이러한 정책이 산업별 성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로, 우리나라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은 1990년대 초반 33%에서 2000년대는 29%로 하락하여 비교대상 52개국중 26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1990년대 이후 법정세율의 인하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법인의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0년대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이 관찰되며, 헝가리(11%), 대만(14%), 홍콩(14%), 싱가포르(22%) 등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폭 낮고, 브라질(28%), 스웨덴(29%), 영국(30%), 중국(30%) 등의 유효한계세율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금융부문의 유효한계세율이 낮고 통신부문이 가장 높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의 정도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차별적 적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셋째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다소 상승하여 자산대비 3.7%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감가상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넷째로,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양(+)이 아님을 의미

□ **다섯째로, 우리나라의 산업들중 금융산업, 기술산업, 에너지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낮고, 통신산업, 의료산업, 유틸리티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통신산업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감가상각 활용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이 아주 크지 않았을 수 있음



[Session 1-2] Why Does Korea Need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Competition, Regulation and Productivity Convergence in OECD Countries”

OECD국가의 경쟁, 규제 및 생산성 수렴

주세페 니콜레티 (OECD 구조정책분석부장)

- 최근 몇 년 동안 OECD 가입국들이 생산물시장에서 경제주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력하게 제한하지 않는 규제정책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간 생산성 격차는 점차 증가함
  - 각국간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수준이 벌어지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수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반경쟁적 생산물시장의 규제와 노동생산성 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반경쟁적인 규제가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 또한 반경쟁적 규제가 후발국이 기술선진국과의 생산기술 격차를 줄이는 속도, 정보통신기술(IT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적용하는 속도, 신규기업의 진입율,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모형은 산업별 분석모형과 부문별 분석모형으로 구분되는데, (i) 산업별 분석모형은 1978년~2003년까지 OECD 가입국 중 21개국의 네트워크산업 규제지표를 분석의 대상으로, (ii) 부문별 분석모형은 1981년~2003년까지 아일랜드를 제외한 20개국의 규제지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ICT산업과 비ICT산업에서의 규제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함
- 분석 결과 생산물시장에 제약을 가하는 규제는 세계의 생산성 프론티어 (World Productivity Frontier: 각 부문 또는 산업별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충격이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는 조정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생산과정에 통합되는 속도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생산성 프론티어의 생산성 충격으로 인해 규제가 심한 국가의 국내생산성 증가 정도는 생산물시장 규제가 적은 국가들보다 25% 더 작게 나타남

- 생산물시장의 규제가 심한 OECD국가는 반경쟁적 규제로 인한 조정손실이 상당히 클 수 있음
- 또한 비ICT산업보다 ICT와 관련된 산업에서 반경쟁적인 규제의 유해한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국가들은 규제 정책 기조가 강한 국가들보다 고도의 생산기술을 쉽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생산성 프론티어 국가가 양의 생산성 충격을 가할 때 고도의 생산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며 생산성 수준의 증가를 빠르고 쉽게 경험**

- 세계 생산성 프론티어의 기술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는 시기에는 경쟁 촉진적 규제가 후발국들이 기술격차를 좁히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최근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생산물시장 규제의 수렴현상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나타난 신기술의 출현은 국가간 생산성이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세계 생산성 프론티어의 성장속도를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생산성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생산물시장의 개혁은 상당한 정도의 편익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생산성 후진국에서 더욱 큰 편익이 나타남**

- 규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OECD국가의 산업부문별 규제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은 규제개혁 후 10년 동안 연간생산성증가가 0.04% 포인트(영국)에서 1.3% 포인트(그리스) 범위에 걸쳐 나타남
-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쟁비제한적인 산업별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평균생산성증가율은 0.5%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남

□ **생산물시장 규제와 생산성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 ICT를 생산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에서 생산물시장 규제는 ICT산업에의 중대한 투자결정요인임
-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총투자 중 ICT투자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환경 때문에 OECD평균(15%)보다 4%포인트 높았음

- 만약 어떠한 국가가 느슨한 규제정책을 표방하는 OECD국가의 규제정책을 채택한다면 총투자 중 ICT산업의 투자비중은 약 2.5%포인트 가량 증가함

□ **본 논문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신규기업의 창업과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설립이 저해된다는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있음**

- 비록 생산물시장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창업의 비율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OECD국가 중 규제의 정도가 약한 국가의 산업별 규제정책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기업의 진입을 다소나마 증가시킬 것임
- 규제환경은 다국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생산물시장의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규제개혁도 외국기업 자회사의 기업활동을 상당폭 증가시킬 것임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는 기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암묵적으로 규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의 주요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론적·실증적 분석에서는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된 부패, 법과 질서의 준수 등을 대표적 변수로 선택, 활용함**
  - 제도적인 변수나 사회적 관습은 경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진입이나 조업에 있어 간접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부패 등 사회 관습과 제도는 국민소득수준 또는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론적으로 부패의 존재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왜곡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비자의 최적 소비경로도 왜곡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됨**
  - 제도적 변수,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 사용한 부패의 존재로 인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경제 전체 생산량의 감소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업의 생산량 자체도 감소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에서는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조업 동기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부패 등에 의한 암묵적 진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과 이로부터 기업이 얻는 대가는 경제의 소비 패턴까지 변화시키며, 특히 생산에 있어서는 자본의 점유율이 노동의 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에 따른 성장손실이 개도국보다 큼
    - 즉 우리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패의 척결에 노력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약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왜곡과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

□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활용, 1991~2000년간의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66개국의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제도적 여건(변수의 수준)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부패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도 비율에 맞춰 일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님
  - 부패수준이 높지 않은 경제의 경우 부패가 척결됨에 따라 경제성장율이 증가하지만, 부패가 아주 심한 국가 그룹에서는 부패가 감소하며 평균 경제성장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따라서는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부패가 척결되면서(부패지수가 변화하면서) 경제 성장이 오히려 한동안 둔화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낮은 부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시현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
  -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가 어느 정도 척결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패의 추가적인 척결에 따라 경제 성장이 제고될 것으로 추정

□ **실증적 분석 결과 부패와 더불어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여부, 민주주의 등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나라의 부패와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여부, 민주주의 등은 장기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표〉 제도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66개국, 1991~2000)

	부 패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민주주의
부패	1			
관료제의 질	0.81	1		
법과 질서의 준수	0.82	0.80	1	
민주주의	0.80	0.74	0.65	1

- 그러나 각 변수들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부패의 개선, 관료제 질의 제고, 법과 질서의 준수 강화 등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주주의 경우 그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음

- 우리 경제가 부패 수준 (1990년대 10년 평균 ICRG 지수 4.2: 표본국가의 지수는 최저 0, 최고 6)을 OECD 평균수준(1990년대 10년 평균 ICRG 지수 4.8)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1990년대의 10년간 약 0.8%p 정도의 추가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1990년대 우리 나라의 법과 질서의 준수 정도는 ICRG 지수로 평균 4.4 (표본국가 지수는 최저 0, 최고 6)로 나타났으며, 이 지수가 1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경우 약 0.9%p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1990년대 우리 나라의 관료제의 질은 ICRG 지수로 평균 3.3 (표본국가 지수는 최저 0, 최고 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서구 또는 싱가포르와 같이 4를 유지하였을 경우 약 0.8%p의 추가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민주주의가 미숙한 국가 그룹에서는 민주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성장이 지체되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룹 (ICRG 지수가 약 3.6을 넘는 경우: 최저 0, 최고 6)은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며 성장율이 증가하는 모습 발견
- \*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으로 ICRG 지수는 5를 기록, 민주주의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주의]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변수들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각 변수들이 모두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각 변수의 개선에 의한 추가 성장 가능성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

예) 우리나라의 법과질서 준수, 관료제의 질이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해서  $0.9+0.8=1.7\%p$ 의 추가 성장이 가능한 것은 아님. 0.9%p보다는 크지만 1.7%p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

- 이 결과는 국내투자, 해외투자, 개방의 정도, 교육수준, 초기 국민소득 등의 주요 변수를 제어한 상태에서 얻어진 수치임

## [Session 2] Experiences and Lessons

### “ The American Experience in Regulatory Review and Reform: Lessons For Korea”

#### 미국의 규제개혁: 미국의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

도미닉 만치니 (미국OMB 이코노미스트)

- **본 논문은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규제개혁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논의함**
  - 미국 규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규제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으로,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규제원칙과 절차에 관한 권한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 행정부를 구심체로 한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됨
  - 규제를 형성하는 과정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부관료들이 규제개혁고정과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 OMB는 고품질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엄격한 규제영향분석은 정책결정시 더욱 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 **대략 30년 전부터 미국은 새로운 규제의 시대(Eisner 교수에 따르면 "효율성 체제")로 들어섰음**
  - 효율성이 규제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경제전체 또는 공공의 순편익 또는 복지를 최대화하는 규제 정책을 추구해야 함을 뜻함
-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 닉슨과 포드 정부에서 근대적인 규제 개혁 운동이 전개된 계기로는 다음 세 요소가 있음**
  - 첫째, 경제학자들 사이에 대부분의 규제가 사회에 이롭기보다는 해로울 수 있으며, 규제가 제공하는 편익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음
  - 둘째, 1970년대 미국의 경험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미시경제정책 및 개혁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집중

- 셋째, 1970년대 초에 도입된 규제 흐름(주로 경제 활동이 건강, 안전, 환경에 미치는 의도하지 못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해 그 비용을 고려하고 반성하는 움직임

□ **성공적인 규제 개혁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헌신적인 정치 지도력이 요구됨**

- 굉장히 복잡하고 특정 이해 집단의 공격에 취약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 과정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됨
- 규제의 과정은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집단들에게 공정하고 공개되어야 함. 이 경우라야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에 대한 지지가 계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지가 없을 경우, 특정 이해집단이 규제와 관련된 정치를 지배하게 됨

□ **투명성의 정확한 개념은 대중에게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해야함을 의미**

- OMB가 모든 의사결정과정을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받곤 하지만, OMB의 사례는 모든 의사소통 과정을 공개할 경우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피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반이 되는 규제영향분석(RIA)은 매우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규제 검토 과정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마찰의 원인은 대부분 대안 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OMB는 숙련된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안 식별과 분석이 필수적임을 상당부분 느끼고 있음.
- 스티글러의 포획이론에서처럼 규제 검토 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분석을 이용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기 마련이므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단지 고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피하는 방법임.
- 미국은 이런 철학과 믿음으로 분석 전문가들과 대안 분석 기법들을 발전시켜 왔음
- 미국에서 RIA는 규제 개발 단계에서 비교적 늦게 만들어 졌으나, OMB는 분

석에 투입되는 정보의 품질이 분석결과의 품질과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봄.

□ **미국이 이런 실험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지난 여섯 행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어왔기에, 미국의 경험은 유사한 규제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도 유용할 것임**

- 하지만 어떤 개혁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일 이론은 없으며,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개혁 성공 요인들을 다를 것이므로 각국의 시대와 상황에 맞는 고려가 필요할 것
- 미국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공한 규제검토 프로그램에서 강조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i) 과학적인 정보의 품질에 집중한 점, (ii) 대안 분석을 강조한 점, (iii) 투명성의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한 점



데릴 포터 (호주 생산성위원회 이사)

- 기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규제개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왔기 때문에 호주 경제는 괄목할 만한 구조적 개혁성과를 이루었음
- 본 논문에서는 호주의 규제개혁에 있어 최근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괄목할만한 규제개혁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단계 전 정책개발단계에서 규제영향보고서(RIS: Regulation Impact Statement) 조항을 삽입한 것이며, RIS조항과 더불어 엄격한 비용/편익분석 및 위험분석, 이행비용의 계량화, 컨설팅조항을 포함시킨 것임
- 정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경제주체에게 적용하여 이행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함
  - (i)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발생시키는 규제
  - (ii) 과도하게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보편성을 가지는 규제
  - (iii) 접근이 용이하며, 투명성을 가지는 규제
  - (iv) 관련 법률과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는 규제
  - (v) 명료하고 분명하며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규제
  - (vi) 경제주체에게 적절한 부담을 주는 규제
  - (vii) 시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규제
- RIS의 주요한 목적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게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달케하여 정책결정절차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의회에 RIS가 제출됨
  - 1997년 3월 호주정부는 현존규제, 신규로 제안되거나, 수정된 규제, 준규제, 규칙 등 규제의 전반적 검토를 위한 RIS 의무조항을 만들었음
  - 이러한 RIS 조항은 규제를 만들고 검토하는 행정적, 사법적 독립권을 가진 모든 호주정부 부서와 청, 국, 위원회 등에 적용됨

□ **RIS 절차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 생산성 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의 산하기관인 규제검토위원회(ORR: The Office of Regulation Review)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와 관련된 기관은 RIS조항을 사정하기 위한 정책개발단계 초기에 ORR과 함께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ORR은 RIS의 적절성에 관해 정책결정자에게 권고하고 평가함

□ **RIS 절차는 아직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못해, '04-' 05년까지 RIS를 요구한 85개의 규제법안 중 의사결정의 중요한 단계에서 RIS의 도입이 80% 까지 떨어짐.**

- 이는 '03-'04년 114개 규제법안 가운데 92%가 RIS를 받아들인 것에 비하면 현격한 감소세를 기록한 것임.

□ **호주정부는 RIS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TFT를 설립(2005년 10월)하였으며, 정부는 규제TFT의 권고 중 상당부분을 수용함**

- 규제TFT는 효율적인 규제절차를 위한 6대 원칙을 권고하였으며 엄격한 비용편익분석이 정책결정시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험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함
- 또한 규제생산기관은 비용편익분석과 위험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며, 호주정부는 비용편익분석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ORR의 규제관련기관에 대한 권고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함

\* 규제생산기관: 호주정부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계층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규제생산기관이 무려 50여개에 달함

"Regulatory Reform, The Lessons from Implementation in OECD Countries  
Low Income Housing Policies Korea Evaluations and Suggestions"  
규제개혁: OECD국가들의 경험과 시사점

스테판 제이콥슨 (OECD수석이코노미스트)

□ **규제개혁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임**

- 규제개혁은 건실한 거시 경제 정책의 보완도구로서 활용될 것이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거버넌스가 실천될 때 규제개혁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임
- 또한 규제개혁은 적절하고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인적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본 논문은 규제개혁의 적절한 시기, 개혁과 관련된 고용과 생산 시장의 상대적인 보완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혁의 정치 경제학에 대한 최근 OECD의 작업들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살펴볼 것임**

□ **규제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적 설계 문제를 포함함**

- 향상된 거버넌스가 단순한 소득의 증가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증거로 볼 때, 규제개혁은 법적·행정적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
- OECD 국가들에서 이행되고 있는 현재의 작업들은 규제개혁이 한 번에 그치는 정책 행위가 아님을 보여줌. 정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더 나은 규제 도구를 찾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유지되어야 함.
- 규제개혁의 주요한 목적은 사전적인 통제보다는 이행성과 사후 평가를 더 강조 하는 것임.
-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위치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떤 국가의 경우 규제의 법적 품질에 대한 강조가 경제적 기준을 더욱 높임으로서 완화될 필요가 있는 반면, 법의 규칙과 대중적 거버넌스 원칙이 미약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법의 규칙에 대한 강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OECD 국가들이 규제개혁을 이행하면서 나타난 시사점은 개혁 목표들을 설명하고 기득권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임**

- 확립된 독점권과 행정적인 통제 문화를 지닌 관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 반면,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들은 종종 흩어져 있거나 조직화되지 못하거나 정부 안에 대변자가 없음

□ **OECD 국가들은 복잡한 요구들을 단순화하고 공공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개혁할 부문들을 식별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신뢰를 얻고 리더십과 책임성을 보여주었으나 국가별 성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남**

- 가장 나은 성과를 낸 국가들은 가장 규제가 심한(the most restrictive) 국가들임. 규제와 관련된 마찰이 가장 적은 가장 선진적인 국가들 내에서 더 일관되고 정부 전체에 걸쳐 접근되었음
- 정부의 통제가 심한 국가들은 다수의 행정 및 허가 절차를 유지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심한 국가들은 국내 경쟁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장벽이 있음

□ **그러나 규제개혁이 국가별로 여러 부문에 걸쳐 폭넓게 이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시장과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그 정도가 미약함**

- 규제는 서비스시장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며, 불공정한 경쟁법의 적용은 다수의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 신규OECD회원국들의 경쟁 환경을 악화시킴
- 통신, 교통, 소매유통과 같은 비제조업부문은 ICT와 연관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비제조업부문의 미약한 경쟁압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이 서로 수렴할 때 경쟁정책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일관성을 보이며 규제정책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규제정책과 시장개방도 서로 보완관계를 보인다면 국내외 기업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